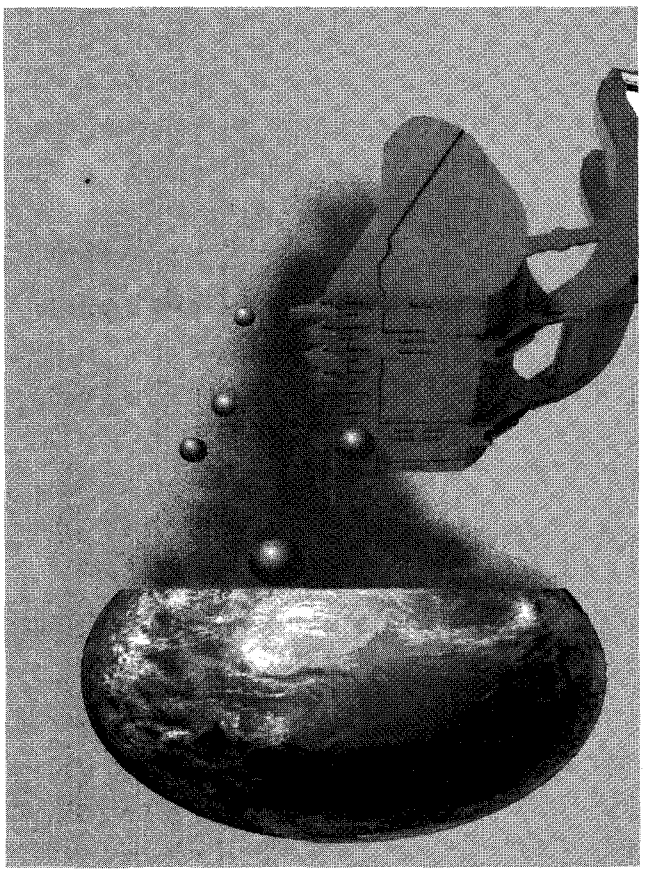
국가폐기물관리대책

- 통합재활용시스템제의 도입으로 폐기물 부담금제의 개편이 예상

"포장폐기물 통합재활용 시스템제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업계의 부담과 책임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대응"

환경부는 지난 8월에 폐기물 환경 정책 분야의 장기 종합 계획('96~2001)인 국가 폐기물 종합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3단계로 이루어진 동계획의 연차별 중점 추진 과제 중 포장 폐기물 관리 강화가 특히 주목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동업계의 대응 방향을 조명해 본다.

먼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합재활용시스템제의 실시이다. 통합재활용시스템제란 포장 폐기물 처리의 역할 분담에서 회수는 지자체가, 생산자는 회수 · 선별 · 재활용토록 책임을 명확히 하며 법률상의 사업자를 지정하여 이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는 등의 일련의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기존의 폐기물 부담금제의 개편이 예상되며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일부 재활용 품목의 사업자로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따른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합성수지류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는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운영하게 될 재활용품 비축시설, 혼합 폐플라스틱 재생공장 등을 활용하게 되므로써 업계 자체의 재활용 시설 설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소재와 제품 생산자의 회수 · 재활용 책임의 강화로 소재 및 제품 생산 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재생품 이용 의무화에 따른 재생 원료 사용으로 제품 생산 기술 개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01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30%를 재활용 목표로 삼고, 합성수지용기 생산자의 폐플라스틱 이용 목표 율을 '97년에 10%, 2001년에 20%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협회는 통합재활용 시스템제가 구축되기 이전까지 현행의 스티로폴 분리수거 체제의 구축으로 재활용율을 높이고 포장용기재활용단체협의회와 함께 업계의 부담과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이다.

또한 통합 재활용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는 생산된 재생품의 대량 수요처 확보를 위해 에너지 회수화에 따른 혼합 폐플라스틱 고형 연료화 및 고로 제철소 등에서 대체연료로 사용하는 기술 연구 검토가 강화될 방침이다.